

시 정 질 문 서

【서강진 의원】

1. 각 동 주민센터에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설치하여 본인의 공과금 납부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공과금을 수납기를 통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2. 정당의 정치적 행사인 정책토론회에 부시장을 참석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시장은 재발방지 대책과 이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3. 화장장과 관련하여 부평구와 부천시 간 하수종말처리장을 빅딜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은?
4. 광역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이 있었는데 실현가능한가?
5. 시장이 공약한 하수종말처리장과의 빅딜 사업으로 부평화장장을 부천시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고 향후 광역화장장을 건립하여 부천의 최대 현안 사업인 화장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약을 실천하지 못할 시 시민의 불편사항과 역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람.
6. 시장은 공약사항으로 구청을 폐지시키고 광역동 체제로 행정을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많은 업무를 예전과 같이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7.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장중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줄 안다 하여 모든 인사권과 예산의 편성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정으로 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운영하겠다고 했다, 물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자문을 받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연정을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시정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

는 법적근거는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그렇게 운영할 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연정이 실패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제가 있을 시 시장은 90만 시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지와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바람.

8.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하루속히 전면 실시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재원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실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9.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로 했는데 일부만 서둘러 실시하는 이유는?

10. 5~6학년 일부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혜 받는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반대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은 있는지?